

게임산업 발전기반 조성

두세훈 도의원 발의 '게임산업 육성 조례안' 도의회 통과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창업공간 운영

전북도의회가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안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세계적으로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도내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게임제작 및 유통지원, 기술개발의 추진·지원, 건전

한 게임습관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도내 중소 게임업체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창업공간을 운영하고 창업지원 및 게임업체 양성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운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게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게임중독 및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검사 등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의 게임산업이 활성화 되고 경쟁력이 강화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도민 환경보전 증진

국주영은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도민의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산림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주 의원은 "최근 도민들의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대기환경 등 환경보호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00만대를 넘어섰고 세계시장이 무궁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시장에서 내연차에서 무궁해차로의 전환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제정이 도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예산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홍보 및 교육,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심 내 탄소배출의 핵심 오염원은 승수 부분이기에 무궁해차로의 혁신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대선 공약개발 특위 운영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3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장인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이환주 남원시장, 소준호 우석대학교 교수,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등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전주 경륜장 이전·해당 부지, 서부권 중심으로 개발"

이미숙 시의원, "현 시설 유지 선수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

전주 경륜장의 이전과 해당 부지의 시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이 낡아 보수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륜장을 다른 곳에 새로 지어 옮기고 현 부지 일대를 전주 서부 생활권 시간의 중심으로 되게 하자는 내용이다.

13일 전주시의회 임시회(더불어민주당, 호자4·5동, 부의장)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이 이전할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경륜장을 새로 짓고 현재 부지 일대를 시가화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활력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전주 경륜장은 30년 전인 지난 199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전주대학교 구정문 일대에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했다. 관람석 2,500석 규모의 이 시설은 건립 당시만 해도 전국에 몇 개 없는 시설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가 선수들에게 국한되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는 철거 논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각종 대회 때마다 팽질치 보수를 하고 있는 것도 선수 안전과 보호 측면에서

비합리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이런 경륜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옮겨 경륜 선수 보호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는 "경륜장은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 다른 부지로 이전해도 가능 수행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월드컵경기장 일대로 경륜장을 이전하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자연녹지지역인 현 경륜장 부지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현 도시 기본계획에 그려져 있는 큰 그림을 이런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말았다"

/김윤성 기자

"합리적 노점 운영방안 나와야"

정성길 시의원, "서신2지구 당산로 일대, 대표 무질서 지역"

전주시가 적극적인 노점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등록점포를 양성화해 제도권 지원을 받도록 하되, 무분별한 노점 영업은 단속을 강화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전주시의회 임시회(더불어민주당, 서신동) 의원은 "전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계형 노점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와 함께 양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지역에는 814개 노점이 '잠정허용구역'이란 명목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전봉시장 주변에만 397개가 운영되면서 시장 상거래 비중이 상



당한 편이다. 특히 특장점 작업을 통해 30년 넘게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남부시장과 객사뒤편의 107개 노점은 비교적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장이나 객사 주변을 제외한 400여 개 노점은 장보기 편의 제공이란 명목 하에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신2지구 당산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일대 노점상들은 시가 허용한 600m 구간을 넘어 주변 공원이나 인도까지 불법 점거를 일삼하고 있다.

일부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까지 완전 점거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고정화 돼 있는 노점을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을 시내버스 승하차장에 주차해 놓는 행태도 있다.

정 의원은 "생계형 노점에 대한 잠정허용은 허용구간과 시간을 준수하고, 차량은 물론 하자 후 즉시 이동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에 안전 확보를 우선적 가치로 봤다. 그는 "잠정 허용구간이라도 횡단보도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가 확보가 필요한 곳은 원칙적으로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해 안전 기준에 맞는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제도권 지원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자동차 대체부품 수출 규제 완화해야

조동용 도의원, 건의안 발의... 대기업 독과점식 구조 문제점 지적

세계 애프터마켓은 지난 2017년 기준 1,104조3,000억(약 9,55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내 대체부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상당부분 어려운 실정이다.

애프터마켓이란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중고차, 자동차부품 등이 애프터마켓에서 주로 거래된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제384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해외수출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현 자동차부품산업이 가진 대기업 독과점식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 대체부품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관계 기관·업계·부품협회 간의 MOU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에 한해서 디자인된 보호기간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인증대체부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해 정책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이다. 상호협약에서 국내시장만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외시장의 경우 여전히 디자인된 보호기간 20년이 지나야 수출이 가능하다.

도내에는 30개의 자동차 대체부품업체가 있으며, 작년 총 매출 규모는 12억 2,200만 원으로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25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등 대체부품시장의 활성화정도에 따라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도가 나서 새만금 일원에 전기차 클러스터와 함께 자동차 대체부품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동용 의원은 "우리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국내 대체부품산업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대만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 애프터마켓을 일찌감치 선점하고 있다"며 "실제로 세계 애프터마켓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인 북미지역 공급물량의 90%를 대만의 부품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 차종에 대한 대체부품까지도 대만산 제품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대기업 독과점식의 현 산업구조에 대한 자각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보호법부터 서둘러 개정하고, 법개정 이전이라도 협약을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수출을 허투루 불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행정수도권·호남 잇는 강소권역으로"

민주 대선 후보' 김두관 의원, 전북공약 발표

"전북을 인구 500만 이상 호남권 메가시티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강소권역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은 대기업 분공장과 분점 중심의 허약한 산업구조 속에 현대중공업과 GM대우 공장 폐쇄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크게 안타깝다"면서 "전북 산업을 분사와 창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북의 주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전북경제 엔진을 고성능 엔진으로 완전히 교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전북은 본격적인 균형분권 정책이 시작되면, 행정수도권과 호남의 접경 위치로 독립적 정책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농어업과 디지털산업의 결합과 뉴모빌리티와 그린에너지 결합하는 신성장 산업에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을 확대해 정부의 금융뉴딜 정책 중 자선운용뉴딜 분야와 신성장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면 전북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 ▲전북 혁신도시 확장과 제3금융도시 지정으로 더 큰 정책 건설, ▲전북권 광역교통망 완성으로 대한민국 교통중심지로 부각, ▲새만금, 군산, 익산에 특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연 가운데 전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민주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정책위 부위원장도 겸임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진위원장 겸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동시에 임명됐다.

특히,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최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추가 임명된 것으로,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갑을(甲乙)' 관계를 해소하고 사람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 중심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민주당이 2013년 발족한 단체 공식 기구다.

조지훈 전 위원장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한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 4선 의원을 전주시의회장을 역임할 당시에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 확대를 방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책위원회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률과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당내 중추적 기구다. 무엇보다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 부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것은 '을' 살리기 입법과 예산을 추진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윤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